

지역 과학두뇌 이끌 광주과기원장 '글로벌 CEO' 뽑아야

광주 R&D 특구·학부 신설 등 현안 풀어야

지난 6월 허성관 전 원장의 사퇴로 5개월째 공석 상태인 광주과기원장에는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걸맞게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CEO형 원장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과기원이 단순한 학술단체나 교육기관이 아니라 광산업 등 광주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자, 광주과기원의 순환 여부에 따라 지역 경제의 미래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의 해묵은 숙제인 광주 R&D(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광주과기원 학부 과정 신설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나기 위해서도 학문적 성과는 물론, 글로벌 마인드와 정치적 능력을 갖춘 CEO형 원장이 적격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치적 연구주의

에 의해 원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원장 선임 이후 공정성은 물론, 광주과기원의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주과기원 원장 선임의 중요성은 KAIST 서남표 총장이 KAIST를 세계 10대 대학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테뉴어(tenure·정년보장) 교수 심사 강화'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대학의 CEO가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이미지와 전체적인 실력 자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이다.

광주 R&D 특구 지정의 신호탄이 될 광주과기원 학부 과정 신설이 최근 관계 부처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설

득력으로 무장한 CEO형 원장이 정치권 상대로 뛰어야 하지만 원장 공석 상태는 5개월째 계속중이다. 학부 과정이 신설된 후에도 각종 신규 사업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광주과기원은 오는 9일 이사회(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를 열어 3명으로 압축된 원장 후보들을 놓고 심사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총이사 12명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과학기술부의 승인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광주과기원장 추천위원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이사장)는 최근 회의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한 5명 후보 가운데 김기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김도한 광주과기원 생명과학과 교수, 이관행 광주과기원 기전공학과 교수 등 3명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바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능 D-8...고사장 물품 발송

광주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9일 앞둔 6일 휴대폰 소지 여부를 검색할 금속탐지기, 시험 안내문 등 수능 시험 고사장에서 사용될 각종 물품들을 광주 시내 30개 고사장으로 발송했다.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이 고사장으로 보내질 각종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다. > 관련기사 7면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회창 '대권 삼수' 도전

오늘 출마 선언...이명박·정동영과 3者 대결 재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오후 2시 대국민선언을 통해 한나라당 탈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대선을 42일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전 총재의 출마로 향후 대선 구도는 보수세력의 분열과 민주·개혁세력의 총결집 시도로 전개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이 전 총재 측 이홍주 특보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재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7일 오후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 전 총재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형식으로 그동안의 고심 끝에 내린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대국민선언 내용과 관련, "최종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시 정치 일선에 설 수밖에 없는 심경을 진솔하게 담게 될 것"이라며 "이미 다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뒤집으면 수습이 더 힘들

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해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특보는 또한, "이날 구체적인 분야의 정책 제시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10년 동안의 좌파정권 집권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사죄하는 동시에 좌파정권 3기 집권을 저지하고 우파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로 4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측이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요구한 이재오 최고위원 퇴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권·대권 분리'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내분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범여권에서는 정동영 후보의 '반부패세력 연석회의' 제안에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반부패세력 집권 저지'를 위한 정동영·권영길·문국현 3자 회동 제의를 화답하면서 후보단일화를 통한 민주·개혁세력 총결집이 가시화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어제 밤 영장 발부... "범죄 내용 가법지 않다"

부산지검은 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5면>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내용도 가법지 않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검찰과 전군표 국세청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청장이 정상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6천여만원의 받은 혐의 입증

을 놓고 칼과 방패의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사에서 검찰은 "정 전 부산청장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건넸고, 이 가운데 가장 큰 2천만원이 지난해 10월10일 오후 1~2시에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해 10월10일 정 전 부산청장은 국세청에 오지도 않았다"면서 당일 국세청 현관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기록을 복원한 USB 저장장치를 재판정에 증거물로 제출하는 등 수리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협뉴스

한미FTA 피해 농어민 21조 지원

"농촌 문제 해결책 아니다" 농민들 냉담

정부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농수산업 보완 대책으로 10년동안 2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규모가 기대

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의 대응책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농촌 정주여건 개선이나 농촌교육 여건 향상 등 근본적인 농

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농림부는 6일 농업 경쟁력 강화와 피해 보상을 위한 '한미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을 확정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미FTA 투기자 재원은 기존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4~2013)에서 기존 배정액(7조원)과 증액(2조원), 다른 사업 축소에 따른 전용(3조 1천억원)을 통해 12조

1천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 3천억원을 확보해 20조 4천억원을 조성키로했다.

관련 해안수산부는 향후 한·미 FTA 수산분야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2008~2013년 4천681억원을, 2014~2017년 2천581억원 등 10년간 7천2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